

## ◆ 17년 6월 고1 16~18번

###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말 중앙 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조선 왕조를 세운 신홍 사대부들은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역(國役)\*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따라서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새 왕조가 추구한 국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처럼 국역 대상의 확보를 새 왕조 통치 체제의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법제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⑦ 양인과 ⑧ 천인으로 나누었다. 이들 사이에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등이 있었는데 먼저 의무 면에서 양인 남자는 국역인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의 의무가 있었다. 이에 비해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권리 면에서 양인과 천인은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서 뚜렷이 차이가 났다.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보아 매매·상속·양도·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는 곳을 옮길 자유가 없었다.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양·천 사이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보다 권리 면에서 양·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관직 진출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양인 중에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양인은 일단 관직 진출권이 있었다. 더러 노비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 정규 관직인 유품직(流品職)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반드시 양인이 되는 종량(從良) 절차를 먼저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 구분이었지, 실제 사회 구조는 좀 더 복잡했다. 양·천이라는 법적 구분 아래 사회 구성원은 상급 신분층인 양반 계층, 의관·역관과 같은 기술관이나 서얼 등의 중인 계층, 양인 중 수가 가장 많았던 평민 계층, 노비가 주류인 천민 계층으로 나뉘었다.

조선을 양반 관료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양반은 정치·사회·경제 면에서 갖가지 특권과 명예를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그 아래인 중인·평민·천민과는 격을 달리했다. 이를 반상(班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것으로서, 반상의 반(班)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상(常)에는 평민부터 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에서 생겼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와 당시 실제 계급 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구분인 반상제가 서로 섞여 중세의 신분 구조를 이루었다. 중세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분 구조는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차츰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조선 사회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국역 :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지우던 부역.

\*요역 : 나라에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에게 관아의 임무 대신 시키던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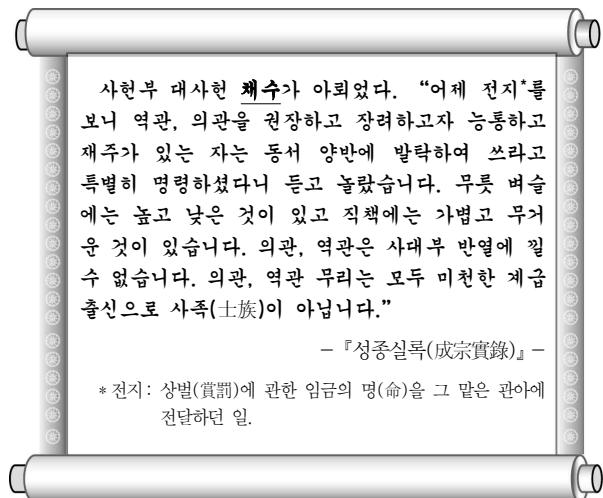
###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인은 반상제에서 '반'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② 양인 가운데 평민층의 수가 양반층의 수보다 더 많았다.
- ③ 조선 시대 사회 구성원은 사회 통념상 네 계층으로 나뉘었다.
- ④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은 양천제에서 반상제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 ⑤ 조선의 국역 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비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 17.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과 ⑧ 모두 군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 ② ⑧은 ⑦과 달리 관직 진출권이 원칙적으로 없었다.
- ③ ⑧이 국가에 큰 공을 세울 경우 ⑦이 될 수 있었다.
- ④ ⑦은 법적 지위 면에서 ⑧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 ⑤ ⑧에 속하는 노비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었다.

### 18. '채수'의 견해를 윗글과 관련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벼슬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려는 의도로 볼 수 있군.
- ②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니라고 한 것은 국가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가 혼들릴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군.
- ③ 의관, 역관과 같은 중인을 동서 양반에 발탁하려는 임금의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④ 기술직을 권장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양반들이 누려온 독점적 권리가 중인에게 집중될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겠군.
- ⑤ 재주가 있는 자를 양반에 발탁하도록 한 임금의 명령에 놀라움을 드러낸 것은 신분에 따라 공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시작차를 보여주는군.

## ◆ 24-6 평 12~17번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남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의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남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④ 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⑦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종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非)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 준다.

\* 직역: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 (나)

『경국대전』 체계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 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제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士)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①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②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은 같았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 ③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 13.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② 유형원은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③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④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 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 ② ㉠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 ④ ㉠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 ⑤ ㉡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 15.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士)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 ㄴ.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 ㄷ. 덕행으로 인재를 환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 ㄹ.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염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① 유형원은 ㄱ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② 유형원은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 ④ 정약용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6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이를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
-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 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군.

17. ①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관용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 ②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
- ③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의 격려로 굳어졌다.
- ④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몸이 추위로 굳어졌다.
- 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 ◆ 11 LEET 언어이해 27~29번

###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종 24년 9월 예조 판서 성현이 글로 아뢰기를,  
“근일의 전지(傳旨)에, ‘관상감·사역원·전의감·혜민서는 본  
래 사족(士族)이 아니니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 넣지 말고  
내의원만 넣어라’ 하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 통역 등 일체의  
잡학(雜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 없으므로 그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잡학을 문반의 직임으로  
삼고 잡과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  
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종께서는 문교(文教)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  
학에도 뜻을 두셨기 때문에 당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혹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A] 장차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한미한 무리로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다만 삼사(三司)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읍덕이 자손에게 끼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밭과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  
물고 있어서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학의 부류  
라고 논하여 정한다면 비록 참상관이라 하더라도 혹 논핵을  
당할 경우 법관이 바로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3품에  
오른 자도 읍덕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ا  
면 사람들이 다 흘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기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내의원과는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진대 예전 그대로 두소서.

신이 분수에 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예관(禮官)으로 있으니,  
맡은 바 문교와 잡학의 일에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권장할 만한 방도를 다음에 조목으로 전술하겠습니다.

1. 잡학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  
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  
(取才)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맡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  
음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  
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1.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아니하고, 『노결대』,  
『박통사』 등의 책은 다만 외우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금후는 사서(四書)와 경서와 역사서는 한어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註疏)의 깊은 뜻을 묻고, 『노결대』 등의 책  
은 외우게 한 뒤에 반복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의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  
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  
니다. 금후로는 『노결대』, 『박통사』를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취재

할 때에는 음을 묻는 것과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  
지를 운전하게 해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 『역어지남(譯語指南)』은 다만 물건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그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날마다 쓰는 보통 말도  
또한 다 분류해서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어와 여진어도 한어  
처럼 ‘지남(指南)’을 만들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  
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상감 등의 관원을 문관과 무관의 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  
냐 아니하냐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전의감과 혜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역원은 한어를 전하고, 율학(律學)과 산학(算學) 또한 모두 빼  
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중히 여겨 문  
반과 무반에 넣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내의원  
과 내시부 등만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이 잡학인  
이 통분해 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잡학인이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일 잡학직이라고 논하면 누가 즐겨 입속하  
여 그 직무를 힘써 익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철겸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유 없이  
잡학직으로 강등하여 옛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편하지 않을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⑦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2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역원의 현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관에게는 역사 지식도 중시되었다.
- ② 역관 선발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③ 회화 능력이 뛰어난 역관이 부족하였다.
- ④ 역관 선발 과정에서 실무 능력이 간과되고 있었다.
- ⑤ 외교를 위해 중국어·일본어·여진어 역관을 양성하였다.

### 28. ⑦과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하들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

- ① 잡과 과거 제도 확대의 당위성
- ② 지속적 인재 충원의 필요성
- ③ 전문적 잡학직의 중요성
- ④ 잡학 기관 간의 형평
- ⑤ 조종의 법의 권위

29. 위 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이를 나누어 사민(四民)을 삼으셨으니, 사·농·공·상이 각각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선비는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고, 농부는 농사에 힘쓰며, 공인은 공예를 맡고, 상인은 물화를 유통시키는 것이니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관과 의관 등의 잡학인은 나라에 없을 수 없지만, 직임은 각기 분수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같이 거쳐하게 하고, 귀천을 섞이게 한 연후에야 권장이 되겠습니까? 벼슬과 상은 임금이 영웅을 다루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聖王)은 재덕(才德)이 탁월하거나, 혹은 공로가 중대하고, 혹은 다스린 성과가 제일인 자를 발탁한 일은 있어도, 환관과 역관, 의관을 중용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즉시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잡학인이 청류(淸流)에 섞이지 않게 하소서.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인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잡학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 ④ [A]는 <보기>와 달리, 잡학인의 현실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보기>는 [A]와 달리, 직분에 따른 신분체의 불가변성을 주장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 ◆ 13년 3월 고1 24~26번

###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피져 나온 단일 민족일까?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서의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⑦ 한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귀화 성씨가 적지 않다. 또 한국의 토착 성씨인 김 씨나 박 씨를 보더라도 그 시조는 알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적어도 '단군'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모신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된 전통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의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뻗어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출현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리 올려 잡아도 구한말(舊韓末)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의식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탈과 분단을 겪은 20세기에 단일 민족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신분 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 민족을 내세우는 것의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주노동자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지역 감정을 떠올리면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겨레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단일 민족임을 외쳐 왔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악화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를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600여 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다.

### 24. 윗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군은 고조선의 건국 시조이다.
- ② 나치의 민족주의에는 유대인에 대한 억압이 숨어 있다.
- ③ 단일 민족 의식은 신분 의식을 타파하는 데 가치가 있다.
- ④ 민족의 단결 의식을 고취하는 데 단일 민족 의식은 유용하다.
- ⑤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25. ⑦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 민족 의식은 구한말부터 생겼기 때문에
- ② 조선족은 동포인데도 국내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 ③ 토착 성씨들도 단군의 조상임을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 ④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는 성씨가 많기 때문에
- ⑤ 조선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대상들의 동일성을 추구해 왔다. 그 동일성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인간, 동물, 생물, 여성, 남성, 백인, 흑인 등과 같이 다양한 개체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개념들이다.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개체들이 가진 복잡성과 차이는 없어지고 획일화된다. 반면에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대상과는 차별화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 ① '우리', '한겨레' 등도 다양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말이 되겠군.
- ② '민족의식'이라는 것도 이성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나치 독일'이 '하나의 민족'을 내세운 것은 그 구성원을 획일화 하는 효과가 있겠군.
- ④ '독일인'과 '유대인'이라는 분류는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겠군.
- ⑤ 각각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 95 수능 44~49번

[44~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랑스 시민 혁명 후에 나온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적인 평등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남성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다. 시민혁명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신분이 낮은 남성에게는 법적인 평등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 발발 2년 후인 1791년 올랭프 드 구즈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 선언’이 발표되었고, 1792년 영국에서 는 월스톤 크라프트가 여권옹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나)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19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나 여성의 법적인 시민권, 곧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그 후 한동안 침체했던 여성 운동은 1960년대부터 다시 활성화되어 성 역할의 개선, 교육과 고용의 평등,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 등 여성의 자율과 평등에 관한 법률적 보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취업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

(다) 여성 문제에 관한 이론도 다양해지고 체계화되었다. 초기 여성 운동을 주도해 왔던 자유주의적 여성 해방론 외에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 급진주의 여성 해방론 등이 새로이 출현하였고, 성 차별의 사회화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로써 남녀의 능력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교육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의 성 역할과 성격 형성이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인류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역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니며, ① ‘여성

다음’과 ‘남성다음’이라는 고정 관념은 성 차별의 사회화 결과로서 그릇된 인간관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라) 그러나 이것으로써 남녀의 불평등 구조가 아주 개선된 것은 아니다. 남편은 생산 활동을 하고 부인은 가사를 전담하는 식으로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한, 생산 활동에서 소외된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 여성의 직업을 갖는 일이 점차 늘어 가고는 있으나, 여성의 노동력은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거나 버려지기 쉬운, 매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임금 역시 여성은 대체로 남성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의 조건 속에서도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여성들로서는 자본을 위해 값싼 노동력의 ② 저수지 역할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가사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역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마)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잘 못되어 있다. 사회의 구성이나 역할에서 여성의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남녀 고용 평등과 육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③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4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1960년대 이후에 남녀간의 사회적 지위는 대등해졌다.
- ② 20세기 이전까지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 ③ 여성의 지위는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 ④ 여성들은 가사 노동 때문에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
- ⑤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보장되었다.

45. 각 단락에서 평등에 관하여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선언적 평등
- ② (나) — 법률적 평등
- ③ (다) — 사회적 평등
- ④ (라) — 경제적 평등
- ⑤ (마) — 교육적 평등

46. 이 글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 ② 여성 운동이 전개되어 온 과정
- ③ 여성 문제에 관한 이론의 발전
- ④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되는 현실
- ⑤ 여성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47. ㉠ 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 ① 우리 언니는 마음이 좋아서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빠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지요.
- ② 요즘엔 사내 아이들이 여자 애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 애들보다 더 나약하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 ③ 그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다 아버지 때문이야. 그 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든.
- ④ 어머니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남성은 아내에게서 강한 모성을 느끼는 법이지요.
- ⑤ 대부분의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사회 활동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48. 문맥상 ㉡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천(源泉)
- ② 수문(水門)
- ③ 공급원(供給源)
- ④ 양성소(養成所)
- ⑤ 제조실(製造室)

49. ㉢ 의 논리적 전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남녀 평등은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 ③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④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 ⑤ 편견이 여성 문제 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다.

정답: 44.② 45.⑤ 46.⑤ 47.② 48.③ 49.②

## ◆ 06 경찰대 1차 16~20번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사회학자들은 파시즘이 단지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성격에 내재한 항구적인 것이며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단지 그 극단적 형태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파시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침투해 있어 그것이 파시즘이 아닌지 조차 모를 정도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 중에는 성(性)과 가족,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범주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범주들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가르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에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 파시즘은 이러한 경향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히틀러에 따르면, “남녀 각자가 자연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한, 남녀 간 갈등은 (...)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자연이 부여한 임무’란 남녀의 성적 특징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기에 나온 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파시즘은 “전쟁이 남자의 것이라면, 어머니다움은 여자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파시즘이 이러한 남녀의 자연성이 나타났던 과거를 황금시대로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쟁을 미화하는 파시즘에 있어서는 호전성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지닌 남자가 국가의 주체가 된다. 이 주체는 부드러움과 가정의 수호천사, 자녀 양육의 책임 등을 지닌 여성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권력은 남자의 영역이며, 가정 또는 사적인 생활은 여자의 영역이 되고 만다. “어머니가 없는 민족, 요람이 없는 민족은 (...)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결국은 노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성별 구분이 뚜렷한 가족주의적 국가·민족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여성의 모성성(母性性)을 신화화(神話化)하는 동시에 여성은 가정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억제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독신자나 이혼녀, 그리고 자녀를 안 낳으려는 부부 등을 비정상으로 보게 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 자율적인 개인적 삶이 들어설 공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적 삶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과 파시즘이 충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를 구분하고 남성을 공적 영역에, 여성은 사적 영역에 국한시켜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 변화와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쟁점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 또한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소중함 못지않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소중하다. 거기서 민주적 사회는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 1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시즘의 형성과 가족의 기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② 일상적 삶에 침투한 파시즘의 실체, 무엇이 문제인가?

- ③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파시즘적 요소는 무엇인가?
- ④ 파시즘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⑤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을 가로막는 파시즘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

### 17. 위 글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택한 글쓰기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분석적 접근을 통해 파시즘의 성격을 규명한다.
- ②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 ③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론하여 파시즘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 ④ 반대론자와 충돌하는 이유를 밝혀 파시즘의 비민주성을 보여준다.
- ⑤ 파시즘의 요소를 우리 현실에서 찾아 파시즘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한다.

### 18. 위 글에서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예를 더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⑦의 ‘-화(化)’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됩’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한자어의 경우 이렇게 일부 명사의 뒤에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예가 많다.

- ① ‘생명력’의 ‘-력(力)’
- ② ‘자연성’의 ‘-성(性)’
- ③ ‘책임감’의 ‘-감(感)’
- ④ ‘불가피’의 ‘-피(避)’
- ⑤ ‘주체적’의 ‘-적(的)’

### 19. <보기>에서 글쓴이가 옹호할 만한 것은?

#### <보기>

- ⑦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불효지.
- ⑧ 집을 팔려면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해.
- ⑨ 남자의 정년은 65세, 여자의 정년은 61세가 적당하지.
- ⑩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

- ① ⑦, ⑧
- ② ⑦, ⑩
- ③ ⑦, ⑩
- ④ ⑧, ⑩
- ⑤ ⑧, ⑩

### 20. 위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파시즘은 자유주의자들의 삶의 태도를 긍정하지 않는군.
- ② 파시즘은 전쟁을 예찬하면서 모든 국민을 국가에 종속시켜 하는군.
- ③ 파시즘은 과거의 황금시대에 나타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군.
- ④ 파시즘은 남녀의 성 역할의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군.
- ⑤ 참다운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존중해야 하겠군.

## ◆ 19 LEET 언어이해 25~27번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프랑스 극우민족주의 세력인 국민연합은 과거의 인종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프랑스 공화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국민연합은 공화주의의 핵심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시테', 즉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라는 세속화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1905년 법률로 확정된 라이시테 원칙은 당시 보수적 가톨릭이 정치 및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지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 획득에서 프랑스어 및 프랑스 법과 가치에 대한 의무가 강조됨으로써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보다는 통합되는 자의 책임과 의지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원래 국민국가 시기에 인민은 동일성에 기반한 '네이션(nation)', 즉 '민족/국민'이라는 틀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다. 네이션의 동일성은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폐쇄적 '민족' 개념과 정치적 원칙에 대한 동의만을 조건으로 하는 개방적 '국민' 개념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왔다. 후자가 전자보다 공화주의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극우민족주의**에서 제시하는 네이션은 문화적 개념과 시민적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경계를 갖는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만 작동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는 네이션을 새로운 상징, 가치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네이션에 대한 호명을 시도한다. 네이션의 구성에서 극우민족주의자들은 과거처럼 종교, 문화 등의 기준을 통한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 방식, 즉 이러저러한 것은 네이션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네이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네이션을 재구성한다. 그들에게 네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망령'일 뿐이다.

또한 그렇게 구성된 네이션은 시민들의 집합체,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주권자라는 위상을 잃고, 정치적 주체로서보다는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이 야기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비경제적 유형의 개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결국 정치(politics)는 사라지고 치안(polic)만이 남는다. 국민국가가 수준에서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밀바팅이 되었던 공화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사회적 국민국가는 후퇴하고, 이민 노동자 등 잉여 노동력의 공급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대와 그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배제의 정치 전략이 작동한다. 즉 극우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동거를 통하여 국민/비국민 혹은 시민/비시민의 구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에 '잉여'로서 존재하는 이민 노동자나 '위험한 외국인'을 통합 불가능한 자들로 여겨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유색 인종 노동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위험한 계급으로서 국가 권력이 수행하는 '안전의 정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안전의 위협이라는 비상 상황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강조되면서 '위험한 계급'으로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권력의 예외적인 행사 역시 일상화된다.

극우민족주의는 기존 좌우 정당의 틀을 넘어서 특정 집단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면서 세력화를 추구한다. 극우민족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의 30~40%가 과거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자 계급이라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극우민족주의는 포퓰리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출발이 근대 대의제의 거부와 인민의 직접적 정치 실천에 대한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근대 대의제 정치가 '상징적'으로 전제하는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구성하는 주권적 인민의 배치 안에는 국민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 인민으로 실존하지 않는 많은 인민이 존재한다. 두 차례 세계 대전 전후에 등장했던 전체주의적 권력은 단일성을 위한 상징적 권력과 사회적, 계급적 분할에 의해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동일시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근 프랑스 극우민족주의는 공화주의 원칙을 무슬림에 대한 배제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최근 프랑스 시민권 획득의 조건에서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보다는 이주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 ③ 최근 극우민족주의는 기준에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자 계급을 흡수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 ④ 국민국가 시기에 정치적 원칙에 기반한 국민 개념은 문화적 민족 개념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 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네이션은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직접적 정치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 26. 윗글을 바탕으로 **최근의 극우민족주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화적 민족 개념과 시민적 국민 개념의 차이를 없애면서 국민적 동일성에 기반한 정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② 위험한 계급에 대한 새로운 호명을 통해 치안을 위한 장치이자 연대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네이션을 재구성하여 근대의 대의제 정치를 폐기하고 직접적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 ④ 이주 노동자 등을 공동의 '적'으로 호명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예외적 행사를 정당화하려 한다.
- ⑤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안전의 정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①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근대 정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인민을 정치의 전면에 등장 시킨 포퓰리즘은 대중 영합적 정치로의 변질 가능성뿐만 아니라 ①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 가능성도 지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적인 것’,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협한 동일성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할 주체를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편협한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 ① 국민과 계급,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치안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 ② 정치적·경제적 동기에 의해 생겨나는 이주민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작동시킨다면, 국민적 단일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가 등장할 위험이 있다.
- ③ 대중이 정치체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권력과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구별한다면, 동일화될 수 없는 인민을 배제하는 동일성의 정치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④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을 기반으로 네이션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주체로 삼는다면, 신자유주의로 인해 해손된 국민국가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복원될 것이다.
- ⑤ 비정규직, 난민, 이주 노동자 등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인 것’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국민국가 방식의 해결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적 실천을 모색한다면, 경계 구분을 통한 배제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세계 질서가 도래할 수 있다.

## ◆ 18 LEET 언어이해 1~3번

[1~3] 다음 글을 읽고 둘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의미에서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낙인찍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주 국가의 헌법 질서에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선언적 의미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분야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침례하게 대두하는 대표적인 규범 영역이다.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금지 역시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입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차별 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고용 관계에서도 같은 것을 같은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달라진다. 강행 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비교 대상자와 자신의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차별 금지 법규가 강행 규정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영역에서도, 다시 차별 금지 법규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남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가 설정한 임금의 결정 요소 중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체계를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의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 규정의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차별 금지 원칙의 보호 정도가 강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근로관계라도 연령이나 학력·학벌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성별 등 전통적 차별 금지 사유들에 비하여 차별의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나 원칙의 취지 역시 전통적인 차별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의 변화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므로 ⑦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 1.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① 종교적 신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가 정당하다면 인권 보호라는 취지를 지닌다.
- ②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는 장애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보호되는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③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가치 판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와 연령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동일하다.
- 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에 반한다.
- ② 고령의 전문직 종사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연령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동일 조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면 임금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 및 정책적 목적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는 사용자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 ⑤ 학력·학별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인권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정책적 목적에만 의존하여 제정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①과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특정 연령층에게 취업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게 된 법규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 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정년을 45세로 정했다면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 ㄷ. 50세를 넘은 퇴역 군인은 예비군 관련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 05 MDEET(예비) 언어추론 20~21번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사회 운동은 기존의 사회 제도 밖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운동의 공간과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압축 성장’으로 불릴 만큼 급속하게 전개된 국가 주도의 대외 의존적 산업화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급격하게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형태의 사회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의 막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 억압되었다. 또한 사회 운동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운동은 규모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운동’의 전개와 여성·환경 등을 쟁점으로 하는 ‘신(新)사회운동’의 출현이 시기를 거의 같이하고 있다.

서구에서 경제적 관계를 중심적인 대립축으로 하는 구사회운동은 분배적 정의, 균형적 계급 관계,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 등의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자본과 노동과 국가가 참여하는 계급 타협과 갈등의 제도화에 기초한 복지 국가의 출현에 의해 그 목표를 상당 정도 실현하였다. 그리고 구사회운동의 목표가 총족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 즉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면서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파괴, 냉전과 군사주의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부각되었고, 이것의 해결을 겨냥한 신사회운동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회운동은 경제적 관계 대신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대립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연대, 탈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의 특징을 보인다.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에서 배제된 사회 성원들과 가치들을 동원하여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성찰적 합의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구사회운동이 그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 즉 구사회운동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제도화되어 계급 타협을 이끌어내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전에 신사회운동이 함께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양한 부문들에서 사회 성원들을 탈계급적으로 동원하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전체적인 사회 변혁에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민주화의 훼방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경제적 관계와는 다른 대립축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면서 사회 성원들의 이익 표현과 참여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완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사회 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자율성 추구라는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사회 성원의 기본권 확보 및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근대의 기획’을 넘어서려는 탈근대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한계뿐 아니라 전근대(前近代)의 질곡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겠다. 근대조차 완성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신·구 사회운동은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0. 위 글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진술은?

- ①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
- ②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완성과 극복을 함께 지향한다.
- ③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물질주의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
- ④ 한국의 사회 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 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발생하였다.

###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발전에 관하여 단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 ② 전체 사회 구조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한국의 구사회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 ④ 사회 운동의 역기능을 부각시키는 보수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이한 사회들에서의 사회 운동 조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